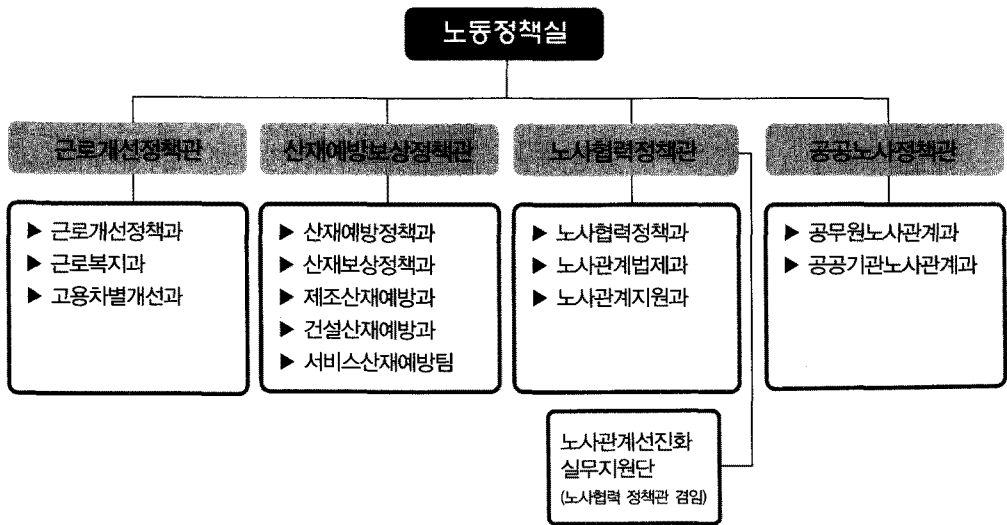


고용노동부 직제 및 직제 시행 규칙 개정(2011.03.02.)



〈기구 개편〉

- 본부 : 3실 13관 35과 3팀 → 3실 13관 35과 5팀(+2팀)
 - 고령사회인력정책팀, 서비스산재예방팀
- 노동위원회 : 중노위 +1과(1국 5과 → 1국 6과), 지노위 +4과(15과 → 19과)
 - 교섭대표결정과 신설 : 중노위, 서울·부산·경기·경북지노위 등 5개소

〈노동정책실 개편〉

- “노사정책실”을 “노동정책실”로, 실장 밑에 “근로기준정책관”을 “근로개선정책관”으로, “산업안전보건정책관”을 “산재예방보상정책관”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
- 근로개선정책관 소속 : (명칭)“근로기준과”를 “근로개선정책과”로, “임금복지과”를 “근로복지과”로, 고용평등정책관에서 이관 받은 “고용평등정책과”를 “고용차별개선과”로 각각 변경
→ (조정)“산재보험과”를 산재예방보상정책관 소속으로 이관

- 산재예방보상정책관 소속 : (명칭)“안전보건정책과”를 “산재예방정책과”로, 근로개선정책관에서 이관 받은 “산재보험과”를 “산재보상정책과”로, “산업안전과”를 “제조산재예방과”로, “산업보건과”를 “건설산재예방과”로 각각 변경하고, “서비스산재예방팀”을 신설
- 노사협력정책관 소속 : (명칭)“노사관계대책과”를 “노사관계지원과”로 변경

〈분장기능 조정〉

- 노동정책실
 - 종전 “근로복지과”에서 “근로개선정책과”로 이관 : 최저임금제에 관한 정책수립과 제도개선,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연구 및 실태조사, 최저임금제도 법령의 해석과 적용 및 실태 파악
 - “근로개선정책과”에서 “고용차별개선과”로 이관 : 연소근로자 근로조건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, 근로기준법 제5장의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및 이행지도에 관한 사항
 - 산재예방보상정책관실 소속 부서별 제조, 건설, 서비스 등 업종별 중심의 재해예방 기본계획 및 대책 수립·시행 등 분장기능 조정
 - 종전 “산업보건과” 기능 중 “산재보상정책과”로 이관 : 진폐예방 및 진폐근로자 보호대책 수립
 - “근로복지과”에서 “노사협력정책과”로 이관 : 임금수준, 임금구조, 임금격차 완화 등 임금정책에 관한 사항

〈소속기관 기구 등 개편〉

- 지청 명칭 등 변경
 - (명칭) “수원지청”을 “경기지청”으로, “춘천지청”을 “강원지청”으로 각각 변경
 - (편제 순) “중부청, 인천북부, 수원, 평택, 부천, 안양, 안산, 의정부, 고양, 성남, 춘천, 강릉, 원주, 태백지청, 영월출장소” 순을 “중부청, 인천북부, 부천, 의정부, 고양, 경기지청, 성남, 안양, 안산, 평택, 강원지청, 강릉, 원주, 태백지청, 영월출장소” 순으로 변경
- 하부조직 명칭 변경
 - “산업안전과”를 “산재예방지도과”로 변경